글로벌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본 한일관계

고길희*
a86830789@gmail.com

<目次>

1. 들어가며	3. 글로벌시민교육을 통한 한일관계
2. 조선식민지배의 책임과 '제2의 죄'	3.1 일본군 '위안부' 문제
2.1 조선식민지배의 책임	3.2 한반도 평화구축과 동아시아공동체
2.2 '제2의 죄'의 문제	3.3 다문화공생사회의 실현
2.3 전후세대의 전후책임	4. 마치며

主 題 語: 글로벌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식민지배 책임(Colonial Responsibility), 한일관계 (Korea-Japan Relations),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다문화공생사회(Multicultural Symbiosis Society)

1. 들어가며

2015년은 일본에 있어서 '전후 70년'인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전 코리언에게는 '광복 70주년'이고, 중국에는 '항일전쟁승리 70주년'의 해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들 명칭에는 근대 이후 일본의 발자취가 남긴 가해와 피해의 역사가 각인되어 있다. 또한 해방 후 혹은 전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보면, 2015년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기도 하다. 한일우호와 협력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올해가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고, 특히 양국 지식인들은 서로 연대해가며 다양한 제안을 했다.¹⁾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목소리는 아베수상을 비롯한 일본정부에는 전달되지 않았고, 올해 8월 14일에 발표된 '아베담화'는 그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것이었다. '아베담화'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시선은 따라왔고, 그 어중간한 대외적 '배려'의 이면에 숨겨진 일본정부의 전쟁반성을

* 山形大學 地域教育文化学部 教授

1) 예를 들면, NEAR재단(2015)『국교정상화50년, 한일지식인들의 권고-한일관계를 이렇게 풀어라.』김영사, 「2015 한일 그리고 세계 지식인 공동성명-동아시아의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위하여-」(2015.7.29.) (「2015 한일 그리고 세계 지식인 공동성명서 발표 및 전문」(2015.7.29.)『경향신문』, 참조) 등을 들 수 있다.

철회하려는 의도에 대해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경술국치 105주년’이 되는 2015년 8월 29일에 ‘한중 일제침략만행 사진 광화문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한국에 있는 한 지인은 “아베가 한국인에게 한국의 민족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실제로 아베정권의 보수적인 움직임은 한국인의 대중 차원의 대일감정을 자극하며, 한국의 민족주의적인 대일감정을 강화시키고 있다. 올해 한국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당시 활약한 류성룡과 이순신을 그린 대하드라마 『징비록』(2월 14일~8월 2일까지, 50회)이 방송되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또한 1930년대 독립운동가들의 친일파 암살을 그린 영화 『암살』(7월 22일 개봉)은 8월 15일에 1천만 관객을 돌파하는 대히트를 쳤다. 그러나 만약 아베수상이 진지하게 과거 역사와 대면하며 사죄하고, 보상하고, 역사를 기억할 것을 약속했다면,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기도 한 2015년에 한일합작으로 한일우호를 그린 영화나 드라마가 양국에서 방송되었을 수도 있었다.

또한 아베정권이 들어서고부터 냉랭해진 한일관계는 양국의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년 5월에 실시된 『동아일보』와 『아사히신문』의 공동 여론조사²⁾에 의하면, 양국 국민들 사이에 역사인식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도 낮아지고 있다.³⁾ 특히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사죄로 충분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1%에 지나지 않았는데 비해 일본인은 65%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한일관계에 ‘단절’은 있어도 ‘극복’은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인 87%와 일본인 64%가 양국의 관계 개선을 바란다고 대답했다는 점,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일본의 20~40대의 60%가 ‘중요하다’고 대답해 60대의 40%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식민지 지배나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일본 젊은 세대가 국가의 대립을 넘어 인권을 중시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한일 양국의 기성세대의 연장자들은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여 젊은이들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 국민들이 함께 역사를 되돌아보며 과거를 청산하고, 화해하고, 기억해가며 미래

2) 이 조사는 2015년 5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해 실시된 것이다. 『동아일보』는 1,011명에게 전화로 조사했고, 『아사히신문』은 3,000명에게 우편으로 앙케트 용지를 보내 서 2,147명의 회답을 얻었다. 회수율은 72%였다.

3) 최근 5년간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일본 54%, 한국 59%이고, ‘좋아졌다’는 양쪽 모두 4%였다. 또한 상대국이 ‘싫다’고 대답한 사람은 일본이 5년 전 조사의 10%에서 26%로, 한국이 같은 질문을 한 2009년 조사의 36%에서 50%로 증가했다. 상대국 사람에게 친밀감을 ‘크게 느낀다’ ‘어느 정도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의 합계는 양쪽 모두 3할이 안 되었다(“日, 식민지 지배에 충분히 사죄했다” 日65%… 韓은 1% (2015.6.18.) 『동아일보』, 關係改善, ともに願う 朝日新聞 東亜日報, 共同世論調査 日韓国交正常化50年 (2015.6.22.) 『朝日新聞』, 참조).

를 창조해가고, 양국 젊은이들이 우호적으로 교류해가며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과제를 실천해가는 일은 한일우호와 동아시아의 평화구축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편협한 내셔널리즘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시민에 의한 교류, 이해, 연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교육의 세계에서 ‘동아시아시민교육’⁴⁾이나 ‘글로벌시민교육’⁵⁾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첫째로 역사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불성실한 자세를 ‘제2의 죄’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둘째로 글로벌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앞으로 한일 양국 시민이 함께 과거 역사와 대면하며,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과제를 실천해가기 위한 교육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할 것이다.

2. 조선식민지 지배의 책임과 ‘제2의 죄’

2.1 조선식민지 지배의 책임

근대 이후 일본의 조선침략 역사에 초점을 맞춰보면, 2015년은 강화도사건으로부터 140년,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으로부터 130년, 청일전쟁 종결로부터 120년, 러일전쟁 종결로부터 110년이다. 이번 아베담화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조선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직접 사죄하는 내용은 없었다. 그 대신 아베수상은 근대 일본의 발자취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백여 년 전의 세계에서는 서구열강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광대한 식민지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우위를 배경으로 식민지 지배의 물결은 19세기 아시아에도 밀려왔습니다. 그 위기감이 일본에게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입헌정치를 수립하고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러일전쟁은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방점: 필자)

4) 日本社会科教育学会 国際交流委員会編(2008)『新しい社会科像を求めて－東アジアにおける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明治図書, 참조

5) ‘글로벌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을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구시민교육’으로, 한국 교육부는 ‘세계시민교육’으로 번역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글로벌시민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아베수상이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이 단적으로 나타나 있고, 더욱이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러일전쟁은 한반도 식민지화와 만주의 이권쟁탈을 위한 전쟁이었고, 그 전쟁 결과로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만 언급해서 끝날 일인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비롯해 중국과의 15년 전쟁에 이르기까지 조선 사람들에게 다대한 피해와 고통을 주었고,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연행의 문제 등은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다. 피해자가 충분히 납득하고 과거와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과거로부터-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자유롭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은가?

필자는 20수년간의 일본생활 속에서 연구자를 비롯한 적지 않은 일본인으로부터 “영국도 인도에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억울하면 한국이 더 부자가 되면 된다.” “구미 각국도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모두 같았다. 일본보다 더 심한 일을 한 나라도 많이 있다.” “일본은 미국에 원폭을 맞았지만 미국을 비판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들을 들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식민지 지배의 반성을 회피하고 제국주의 시대의 행위를 자기정당화 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아베담화의 식민지 지배에 관한 역사인식과 공명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정치가들을 일본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

한편, 일본정부의 불성실한 태도와는 대조적인 것이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과 같은 구미 각국의 움직임으로, 이들 나라들은 다음과 같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에 나서고 있다.

①1993년 1월 17일, 미국연방의회는 ‘하와이 병합 사죄 결의’를 하고, 그 해 11월 23일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해 법률로 공포했다. ②2005년 8월 16일, 네덜란드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식민지 지배(17세기 초반~1942년까지의 약 350년간)와 군사공격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했다. 그리고 2013년 9월에는 인도네시아 점령 통치시대였던 1945~1949년에 저지른 대규모 학살에 대해 사죄하고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③2008년 8월 30일, 이탈리아 베를루스 코니 수상은 리비아에 식민지화했던 시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사죄하고, 그 보상을 목적으로 한 총액 50억 달러(당시 약 5,440억 엔)의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했다. ④2013년 6월, 영국 외교장관은 케냐인에게 가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조형물을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영국은 그 약속대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금도 지급해온 한편, 2015년 9월 12일에는 영국 식민지 지배에 봉기한 케냐인들에게 가한 폭력과 고문과 가혹행위를 반성하는 기념비를 수도 나이로비의 우후루공

원에 설치했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는 조금씩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베정권은 과거를 부정하고, 보상을 거부하며, 근대 이후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발자취를 어떻게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정부의 역사에 대한 태도는 지금 시작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1993년 8월 23일, 당시 자유민주당의 ‘야스쿠니관계 3협의회’에 설치된 ‘역사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착실하게 준비되어 온 것이다. ‘역사검토위원회’는 1993년 8월 10일, 당시 호소카와 수상이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해 “나 자신은 침략전쟁이었다.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반발해 설치된 것으로, 매월 1회 강사를 불러 위원회를 개최하여 1995년 8월 15일에는 『대동아전쟁의 총괄』을 발행했다.

이 책의 마지막에는 ‘위원 일람’과 집필자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위원 일람’에는 고문 8명, 위원장 야마나카 사다노리, 위원장대리 이토 소이치로, 사무국장 이타가키 다다오 외, 중의원의원 76명, 참의원의원 29명, 총 105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물론 거기에는 아베신조의 이름이 있고, 또한 집필자 속에는 니시오 간지와 같이 후에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멤버가 된 사람도 들어있다.⁶⁾ 『대동아전쟁의 총괄』의 발행으로부터 20년이 지난 2015년 8월 14일, 아베신조 수상은 당당하게 식민지 지배 책임을 부인하고, 러일전쟁과 15년전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아베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2.2 ‘제2의 죄’의 문제

아베수상은 이번 아베담화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에서는 전후 태어난 세대가 이제 인구의 8할을 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의 자식과 손자,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한 사죄, 보상, 기억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는 더 이상 다시 반성하고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화해 없이 과거 청산은 가능할 것일까? 전후 조선사연구의 선구자이자 개척자로서 평생에 걸쳐 일본인의 조선관 개선과 한일우호를 위해 진력한 하타다

6) 『歴史検討委員会』(1995.8.15)『大東亜戦争の総括』展転社, pp.446-447

다카시(1908~1994)⁷⁾는 한일국교정상화 직후인 1966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식민지 지배민족은 그대로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 식민지 지배민족이라는 점을 부정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 일본인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일본의 식민지주의를 스스로 부정하지 않으면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없다. 이는 의식의 개혁을 동반하는 커다란 문제다. 조선문제와 한일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실은 일본인의 성장지표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오히려 지금부터가 문제다. 한일문제를 잊어버리는 일은 용서될 수 없다. 조선문제는 일본인의 진가를 묻는 것이다.⁸⁾ (방점: 필자)

이 문장은 지금도 신선한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특히 ‘우리 일본인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일본의 식민지주의를 스스로 부정하지 않으면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엄격하지만 일본인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아베담화를 40% 이상의 일본인이 평가했고, 특히 전쟁에 관련이 없는 세대들에게 사과를 계속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한 사람이 63%에 달했다.⁹⁾

그렇다면 과연 전후세대에게는 과거 식민지배와 전쟁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일까? 부친 쪽 조부가 이탈리아인, 조모는 독일인, 모친은 유대인인 랄프 지오르다노(Ralph Giordano: 1923~2014)는 나치시대의 역사 평가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던 1980년대에 『제2의 죄-독일인이라는 사실의 무거운 짐』(1987)을 출판했다. 90년대부터의 일본관 역사수정주의의 동향을 생각하면, 이 저작은 일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오르다노에 의하면, 히틀러 통치하에서 독일인이 저지른 죄를 ‘제1의 죄’라고 한다면, 1945년 이후가 되어서도 제1의 죄를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부정한 것이 ‘제2의 죄’다. 책임 회피와 스스로 관여했다고 느끼는 능력의 결여로 대표되는 ‘제2의 죄’로 인해 독일인은 인간으로서의 방향성을 상실해왔다.¹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치즘이 재흥할 위협에 처해있는 가 아닌가가 아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다음의 문제에 있다.

오히려 죄 없이 태어난 아들과 딸, 손자 손녀들에 대한 죄를 범해 버린 연장자들의 범죄가 문제다.

7) 拙著(2001)『〈在朝日本人二世〉の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旗田巍と朝鮮日本-』桐書房, 同(2005)『하타 다카시-마산에서 태어난 일본인 사학자-』지식산업사

8) 旗田巍(1966.3.5.)『日韓問題はおわっていない-植民地主義否定からの出発-』『NOMA プレスサービス』第66号(同(1969)『日本人の朝鮮観』勁草書房, 소장, p.124)

9) 「安倍談話, 『評価』40% 朝日新聞世論調査」(2015.8.25)『朝日新聞』

10) ラルフ・ジョルダーノ著, 永井清彦他訳(1990)『第二の罪-ドイツ人であることの重荷-』白水社, pp.9-11

조부모와 부모가 번제하지 않은 것은 아들과 딸, 손자 손녀의 어깨에 올려지게 되므로, 그들이야말로 제2의 죄의 실제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¹¹⁾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야말로 제2의 죄의 실제 희생자’라는 말이다. 즉,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한 과거 청산이 불충분한 탓에 아베수상이 말하는 바로 ‘그 전쟁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의 자식과 손자,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일본에서는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아베수상은 전후 세대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지오르다노가 말하는 ‘제2의 죄’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당한 측과 대화하며, 화해를 위해 서로가 노력해가야 할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식민지 지배 책임의 회피와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가 저류에 숨어있는 역사인식 하에서, 가해 측의 일방적인 욕망에서 단순히 ‘사죄는 이제 끝내고 싶다’는 생각만을 선행시키는 것은 분명히 ‘제2의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를 당한 측에 답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결국 다음 세대에게 문제를 쌓아 넘기고, 일본의 미래 세대를 희생자로 만들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전후 70주년의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 청일전쟁, 러일전쟁 시기의 ‘메이지 영광론’이 많이 이야기되면서 일본인의 ‘공지(ほこり)’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메이지 영광론’은 조선식민지 지배와 만주사변을 합리화하는 역사인식으로 연결되는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도, 전후 일본에서는 지식인은 물론 일반 사람들 사이에 이 논리가 깊이 침투해왔다. 그렇기에 역사가 나카츠카 아키라는 『「일본의 양심」이 보는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을 통해 이 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일본 근대사 인식의 근본적 수정을 요구했던 것이다.¹²⁾

예를 들면, 현행 『중학교학습지도요령해설 사회편』 ‘역사적 분야의 ‘근대 일본과 세계’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독립을 유지하고, 근대 국가를 형성해간 정부와 사람들의 노력을 깨닫도록 할 것.

자유민권운동, 대일본제국헌법의 제정,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조약개정 등을 통해 입헌제국가가 성립되고 의회정치가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된 것을 이해시킨다.¹³⁾

11) ラルフ・ゾルダノ著, 앞의 책, p.21
12) 中塚明(2007)『現在日本の歴史認識—その自覚せざる欠落を問う—』高文研, 나카츠카 아키라 지음, 박맹수 옮김(2014) 『「일본의 양심」이 보는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모시는 사람들, 참조

이와 같이 문부과학성은 역사교육에 ‘메이지 영광론’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젊은이들이 근대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의 가해 역사를 모른 채 일본인으로서의 ‘공지’만을 가지고 아시아 각국 사람들과 진지하게 교류할 수는 없다. 일본정부의 가해책임 자각과 과거청산 결여로 현재 일본 젊은이들은 이미 ‘제2의 죄’의 희생자가 되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를 의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려 해도 긍정하려 해도 기존 교육 커리큘럼은 과거 역사를 배울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일본국의 주권자로서 전후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결국 일본인이라는 사실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2.3 전후세대의 전후책임

한편, 일본인으로서 짊어지게 되는 짐이 무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 일본인의 누군가는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른다. “내가 좋아서 선택해 일본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나는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하고 있지만, 전전의 식민지배는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그러나 일본 국민인 이상 전후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일본의 철학자 다카하시 데츠야의 『역사/수정주의』(2001)는 전후책임 문제를 생각하는 하나의 단서를 던져 주는 책이다.

다카하시의 주장에 의하면, 직접적인 전쟁책임과 죄 혹은 전후책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 행위를 옳다고 하는 일본인에서 그것을 틀렸다고 하는 일본인으로 ‘일본인’의 내실을 바꾸는 것이다. 일본인이 해야 할 일은 죄를 범한 일본인의 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후세대에게는 일본국이 전후책임을 완수하는 일에 대한 주권자로서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 그것은 왜인가? 다카하시는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역사 수정주의자’의 잘못된 생각을 반대하며 자신이 속한 국가의 전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죄인의 자손’이란 취급을 감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반대로 자신과 과거 국가와의 연속성을 끊음으로써 타자의 신뢰를 회복해가는 포지티브한 행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인 것이다.¹⁴⁾

여기서 다카하시가 말하고 있듯이, 전후책임을 다하는 것은 ‘타자의 신뢰를 회복해가는

13) 文部科学省(2008.7)『中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 社会編』(2014년 1월 일부 개정), p.98, p.99

14) 高橋哲哉(2001)『歴史/修正主義』岩波書店, p.13

포지티브한 행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다. 그렇기에 전후 일본사회에서는 소수였지만 과거와 진지하게 대면하며, 일본정부의 반성과 사죄 그리고 기억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 일본인들이 존재했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은 그러한 일본인을 신뢰하며 그들에게서 일본의 '양심'을 보아왔다. 한국인은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일본인은 한국인과 교류할 때 요시오카 요시노리의 『「한국병합」100년과 일본』(2009)에서 나카츠카 아키라가 한 다음 말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역사는 인민이 만듭니다. 사실에 근거한 역사인식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체적인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은 정치적인 힘이 되어 역사를 움직입니다. 조선 침략의 당사자인 일본인의 역사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조선'과 일본은 진정으로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한일과 북일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는 일본인의 역사인식과 국제인식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틀이 있는 역사인식'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일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본과 '한국조선'에 관한 역사인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¹⁵⁾

이와 같이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본과 '한국조선'에 관한 역사인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일이 요구되고 있다. 사무엘 헌팅톤은 『문명의 충돌과 21세기 일본』(2000)에서 일본의 불행은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로부터 신뢰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그 대부분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¹⁶⁾ 그런 점에서 일본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동북아시아와의 화해와 협력이란 관점에 입각해서 '미일 2국간주의 증후군'으로부터 탈피해가며,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강상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¹⁷⁾

3. 글로벌시민교육을 통한 한일관계

지금까지 고찰해온 것처럼, 과거 청산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은 여전히 대립을 반복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는 기후변동, 빈곤, 전염병, 난민과

15) 中塚明(2009)「解題」, 吉岡吉典『「韓国併合」100年と日本』日本出版社, p.248
 16) サミュエル・ハンチントン著, 鈴木主税訳(2000)『文明の衝突と21世紀の日本』集英社新書, p.50
 17) 姜尚中(2003)『アジアの孤児でいいのか』ウエイツ, 同(2007)『増補版 日朝関係の克服-最後の冷戦地帯と六者協議-』集英社新書, 참조

같은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 글로벌하게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 세계에서 바라보면 일본도 한국도 풍요로운 국가로, 인류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솔선해서 참여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양국은 2015년부터 유네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인권, 사회정의, 다양성, 평등,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글로벌 시민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¹⁸⁾

특히 한일 양국의 글로벌시민교육은 과거청산과 화해를 위한 가치관과 지식, 스킬을 모든 연령층의 학습자들에게 제시해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시타바도모에의 『지구시민이 되기 위한 학습 방법』(2005) ¹⁹⁾과 같은 훌륭한 실천이 있었는데, 그 안에 한일 대학생들의 역사학습을 포함시키는 것도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시민교육은 일본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지만, 한국에서는 2000년에 설립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UNESCO Asia 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천에 나서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도 시민권을 얻어가고 있다.

앞으로 한일 양국의 교육은 역사는 물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자원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과제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해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그 모두를 언급할 역량이 그다지 없다. 그런 점에서 이곳에서는 글로벌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교육에서 함께 실천해나갈 필요가 있는 긴요한 과제를 세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3.1 일본군 ‘위안부’ 문제

우에노 치즈코의 『내셔널리즘과 젠더』(1998)는 지오르다노의 ‘제2의 죄’를 상기시키는 중

18) 유네스코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10년’(DESD: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을 추진해 왔고, 2015년부터는 ‘글로벌시민교육’(GCED)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GCED는 교육을 통해 세계를 보다 평화적, 포괄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 스킬, 가치, 태도를 육성하기 위한 이론적 틀이다. 또한 GCED의 목적은 인권과 사회정의, 다양성, 젠더 평등, 환경의 지속성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그것들을 키워가면서, 동시에 한층 더 책임 있는 글로벌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학습자를 격려하는 가치관과 지식, 스킬을 모든 연령층의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19) 下羽友衛(2005)『地球市民になるための学び方』(日本図書)는 3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제는 1권이 ‘知識と行動をつなぐ学び’, 2권이 ‘フィリピンにふれる, アジアに学ぶ’, 3권이 ‘現場体験学習のもつ教育力’로 되어 있다.

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우에노에 의하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인의 범죄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전시 강간이라는 범죄, 둘째는 전후 반세기에 걸친 그 죄의 망각이라는 범죄, 나아가 셋째는 피해자에게 가해의 인지를 거부함으로써 일상적이며 계속적으로 반세기에 걸쳐 지속해온 ‘현재의 범죄’다. 특히 현재 보수파 사람들에 의해 피해 여성의 고발이 부인되고 있는 것은 ‘제 3의 범죄’다. 과거에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에 대해 긴 침묵을 강요당했고, 겨우 침묵을 깬 때 돈을 원하는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인의 ‘이중삼중의 범죄’인 것이다.²⁰⁾

그러나 해방 후 한국사회도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첫 고백을 하기까지 오랫동안 그녀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는 점, 최근까지 한국 역사가들이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오지 않았다는 점, 국민들이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던 점 등을 우선 반성해야 한다. 그 위에 일본과 한국은 함께 교육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사죄와 보상은 일본정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양국의 교육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전쟁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 즉 인권의 문제로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이번 아베담화에서는 직접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면서도, ‘명예와 존엄을 손상 받은 여성들’이라고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유엔인권위원회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쟁과 성폭력, 여성의 인권 문제로서 일본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시위는 2015년 10월 14일 현재 1,200회를 맞이하였고, 그 사이 많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다. 13년 9개월을 넘는 할머니들의 수요시위는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졌고, 세계 여성들의 인권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어왔다.

예를 들면, 2012년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 한국의 할머니 두 분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로부터 법적 보상을 받는다면 그 전액을 전시에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들을 위해 기부할 것을 약속했고, 이를 계기로 ‘나비기금’이 설립되었다. ‘나비’라는 말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모든 여성들이 차별과 억압,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날갯짓하기를 염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기금은 지금까지 콩고 내전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과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지원활동을 해오고 있다.²¹⁾

이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 민족, 인종, 종교를 초월한 글로벌시민 육성에 관련되는 문제로, 현재진행형으로 여성인권을 위한 연대가 세계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

20) 上野千鶴子(1998)『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青土社, pp.100-101

21)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https://www.womenandwar.net/contents/home/home.nx>, 참조

의미에서 재일교포 2세로 한일관계에 종사해온 강상중이 일본 원자력발전 사고와 관련해 언급한 다음 말은 매우 시사적이다.

일본에서는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표면화되어오지 않았다. 국가의 잘못된 전력 정책으로 민간인이 큰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동아시아 내부에서 여성인권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다 강해져 여러 나라가 공동조사와 증언채록 등을 실시하고, 그를 통해 동아시아 전쟁 기억을 국가가 서로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국경을 초월한 시민연대가 필요하다.²²⁾

3.2 한반도 평화구축과 동아시아 공동체

두 번째 과제는, 한일 양국이 역사교육과 평화교육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문제를 가르치는 것이다. 2015년은 한국전쟁으로부터 65년, 정전협정으로부터 62년으로, 지금도 여전히 한반도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의 하나는 반세기 이상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온 민족의 평화적 통일이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자마자 남북으로 분단되어 일본 식민지로부터의 ‘미완성의 해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냉전이 종결되었다고 하는데도 한반도는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휴전체제의 평화적 해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로,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평화적으로 해소되었을 때 전 코리언은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로, 한국, 북한, 일본이라는 세 국가의 틈에서 살아오며 남북으로 갈라진 재일코리아사회도 통일 되게 된다. 셋째로, 그에 동반해서 한국인은 물론 전 코리언의 일본에 대한 응어리도 누그러지게 된다. 넷째로, 동아시아의 안정, 평화, 번영에 공헌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2002년 9월부터 북한에 대해 납치문제와 핵개발문제 등에 대한 질타가 비정상적으로 고조되었고, 그를 하나의 방패로 삼아 내셔널리즘을 동반한 신보수주의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요즘 일본의 여론동향을 보고 있노라면, 강상중이 ‘역사와의, 아시아와의 화해 없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명예로운 지위 같은 건 불가능’²³⁾하다고 했던 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납치나 핵과 같은 북한문제에 대해, 또는 한국의 편협한 내셔널리즘 문제에 대해,

22) 「동아시아 갈등 풀려면 한-중-일 ‘상식있는 시민’ 연대 필요」(2012.9.28)『한겨레신문』

23) 姜尚中(1995)「アジアとの断絶、歴史との断絶」『ふたつの戦後と日本—アジアから問う戦後50年—』三一書房, p.165

그 한편에 식민지 지배 문제를 대치시키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양자는 처음부터 저울에 달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서로 피해만을 내세워 응수하며 스스로의 책임을 무마시키려는 보잘 것 없는 태도로는 아무것도 창조해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근시안적으로 북한문제에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역사가 쌓아놓은 과제는 끝까지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인과의 우호를 끊임없이 염원하며 조선사연구에 종사했던 하타다 다카시가 한일조약 때 했던 말에서 그 해답으로 향하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하의 표명은 여전히 ‘전시대적인 것’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다.

조선인의 민족적 염원인 남북통일을 위해, 그 전제가 되는 남북교류를 위해, 일본인이 솔선해서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남북을 불문하고 조선인을 위해 일본인이 할 수 있는 당면 최대의 선물이며, 동시에 일본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²⁴⁾

이 안에 있는 ‘남북을 불문하고 조선인을 위해 일본인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은 북한 인권문제를 생각하고 지원해가는 일이다. 2014년 12월 22일,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로 채택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마지막에 오준 유엔 주재 대사는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제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한 국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은 그냥 아무나(anybodies)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백만 가족, 친척들이 여전히 북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이제는 헤어짐의 고통을 냉엄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들이 겨우 수백km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 북한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며 가슴이 아프고,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은 비극을 겪은 듯 눈물 흘립니다. 의장님, 이제 저는 안보리를 떠나며 북한에 있는 무고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합니다. 훗날 우리가 오늘을 돌아볼 때, 북한 동포를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그들을 위해서.²⁵⁾

이 연설은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특히 한국의 20-30대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²⁶⁾ 오준 대사의 말을 한일 양국 젊은이들이 공유해가며, 함께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24) 旗田巍(1962)「韓国民衆の声を重視せよ」『世界』12月号(同(1969)『日本人の朝鮮観』勁草書房, 소장, p.91)

25) 「오준 대사 안보리 명연설」(2014.12.22.) <http://tvpot.daum.net/v/v0e13ngrbDKKngblHrwElug>, 참조

26) 「“북한 인권 실태, 가슴이 찢어져” 오준 유엔대사 연설에 2030 열광」(2014.12.30)『중앙일보』

과 북한 인권문제를 생각하고,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를 향해 그것을 발신해가는 일.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한일 양국의 기성세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2015년 9월 19일 오전 2시,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은 안보관련법안을 성립시켰다. 전후 70주년에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거기에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고통을 함께 느끼는 감정, 인권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단지 위기를 부추겨 안보관련법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재료로서 북한을 이용할 뿐이었다. ‘평화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요한 갈통은 ‘안보법안으로는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며, 아베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는 평화와는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일본은 헌법 9조를 가지고 있다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신용’을 강점으로 외교교섭을 해야 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종속국이 아닙니다. 평화 공헌의 분야에서 세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²⁷⁾

갈통과 같은 주장은 이번 안보관련법안 반대운동에서 활약해온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 긴급 행동(SEALDs)’이 2015년 9월 2일에 발표한 ‘전후 70년 선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들은 전후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평화의 존귀함을 다시 한 번 깊이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들은 전쟁의 기억과 많은 희생 위에 선 이 나라에 살아가는 이로서, 무력에 의한 문제 해결을 반대합니다. 핵의 무서움을 직접 본 피폭국에 살아가는 이로서, 핵무기의 폐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며’, 민족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전 세계의 벗들과 협력하여 ‘온 힘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²⁸⁾

SEALDs의 젊은이들은 말한다. ‘우리들은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고통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 마주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은 과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이러한 일본 젊은이들의 생각을 한국인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양국 모두 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국경을 넘어

27) 「「安保法案では平和にはならない」“平和学の父”ガルトゥング博士インタビュー」(2015.9.17.)『日刊SPA!』
<http://nikkan-spa.jp/934569>

28) 「自由と民主主義のための学生緊急行動(SEALDs)(2015.9.2)」戦後70年宣言文
<http://site231363-4631-285.strikingly.com/#sealds70>, 참조

서로 연대해가는 시민을 길러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양국 사람들이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대국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력과 도덕적 능력을 신뢰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면에서 교류해가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3 다문화공생사회의 실현

세 번째 과제는, 한일 양국의 다문화사회화에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공생사회 실현을 도모하는 일이다. 일본은 2014년 현재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외국인 아동학생수’가 29,198명(소학교 18,884명, 중학교 7,809명, 고등학교 2,272명, 그 외 233명),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일본국적 아동학생수’는 7,897명(소학교 5,899명, 중학교 1,586명, 고등학교 332명, 그 외 80명)에 달한다. 그에 대해 한국은 2014년 현재 다문화학생이 초등학교 46,954명, 중학교 55,780명, 고등학교 67,806명, 미취학 약 121,000명으로,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1.07%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 모두 다문화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필자의 근무지이며 외국인 산재지역인 야마가타현에도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외국인 아동학생수’가 32명(소학교23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2명)이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교육부는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2015년 3월)을 발표하고, 다문화유치원 30곳 선정, 초중고 한국어 집중교육(예비학교 80-100교로 확대), 대학생 멘토링(4,000명 규모)에 의한 개별학습 지원과 다문화중점학교 150교 지정과 운영 등에 나섰다.

지면의 제약도 있어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지만, 가장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양국의 역사적 대립이 주는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아베정권 이래 일본의 한국인식은 악화되었고, 한국 측의 일본에 대한 지경도 불신과 경시로 바뀌고 있다. 다수인 한국인과 일본인이 쓸모없는 응수를 반복할 때마다 가장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이는 것은 일본과 한국 사이를 살아가는 마이너리티의 사람들이다. 한일관계가 경직될 때마다 필자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가해자 측에 서게 되는 일본인을 생각한다. 이국인 한국에서 생활하는 일본인 유학생과 주재원, 한국인과 국제 결혼한 일본인과 그 아이들, 한국에 귀화한 많은 ‘일본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고 염려하게 된다.

한국에 사는 일본인 상당수는 지배와 피지배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미래를 말하는 것이 과거를 애매하게 만들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매장하는 것이 되어서 안 되기에, 일본과 한국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언제나 지배민족이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다. 그들

은 ‘제2의 죄’의 희생자들로, 한일 양국의 다문화교육은 여전히 과거 역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한일 양국 정부는 과거 역사 청산과 화해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은 국적, 민족, 종교 등이 다른 존재가 ‘함께 살아가기(Live Together)’를 배우는 다문화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마치며

해방 후 그리고 전후 70년간, 한일 양국의 관계는 대립하면서도 사람, 물건, 돈, 정보와 같은 교류는 확대일로로 걸어왔다. 예를 들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로부터 약 50년을 돌아 보면, 양국의 시민교류는 50년 전 연간 1만 명에서 2014년 현재 일본방문 한국인 관광객 수 270만 명, 한국방문 일본인 관광객 수 230만 명, 총 500만 명에 이르렀다. 또한 시민 차원의 다양한 교류도 활성화되어, ‘들어가며’에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는 ‘2015 한일 그리고 세계 지식인 공동성명-동아시아의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위하여-’가 나오는 등 지식인들의 연대도 확대되고 있다.

아베정권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의 정치적 대립이 부각되고 있지만, 한국 젊은이들은 일본의 현대문화, J-POP, 애니메이션, 패션, 음식문화 등을 즐기고 있고,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의 K-POP, 영화, 드라마, 패션, 화장품, 음식문화 등을 즐기고 있다. 역사인식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들은 문화적 측면에서 상대국에 친밀감을 느끼며 직접 상대국에 유학도 하고 여행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젊은이들이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도 전개되고 있다.

이번 아베담화와 안보관련법안은 양국 대립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의 안보관련법안에 대한 격렬한 저항 등으로 담화에서 침략을 부정하는 선언을 공공연히 할 수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일이다. 당초 목표였던 무라야마담화와 고노담화를 뒤집기는커녕 역으로 두 담화야말로 계승해야 할 내용이 되었고, 향후 교과서 기술 등에서도 두 담화가 정부견해로서 기술되는 사태를 오히려 용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전후 일본사회에서는 소수였지만 과거와 진지하게 대면하며, 일본정부의 반성과 사죄 그리고 기억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 일본인들이 존재했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은 그러한 일본인을 신뢰하며 그들에게서 일본의 ‘양심’을 보아왔다. 한국인은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줄져

『<재조일본인 2세>의 아이덴티티 형성-하타다 다카시와 조선-일본』은 그를 위한 한 연구였다. 한일 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양국 시민은 교류하고, 협력하고, 행동하며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바뀌면 그들도 바뀌고, 그들이 바뀌면 우리도 바뀐다’는 말이 있다. 또한 한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의미의 ‘역지사지’라는 4자성어도 있다. 이러한 말을 명심하며 필자는 일본 젊은이들이 ‘제2의 죄’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또한 한일 양국의 다문화학생이 각각의 나라에서 살기 좋아하도록, 젊은이들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들이 새로운 한일관계를 창조해갈 수 있도록 지원해갈 것이다.

【參考文獻】

고길희(2005)『하타다 다카시-마산에서 태어난 일본인 사학자-』지식산업사
 나카츠키 아키라 지음, 박맹수 옮김(2014)『「일본의 양심」이 보는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모시는 사람들
 NEAR재단(2015)『국교정상화50년, 한일지식인들의 권고-한일관계를 이렇게 풀어라-』김영사
 「동아시아 갈등 풀려면 한-중-일 ‘상식있는 시민’ 연대 필요」(2012.9.28)『한겨레신문』
 「북한 인권 실태, 가슴이 찢어져」 오준 유엔대사 연설에 2030 열광」(2014.12.30)『중앙일보』
 「오준 대사 안보리 명연설」(2014.12.22.) <http://tvpot.daum.net/v/v0e13ngrbDKKngblHrwElug>
 「日, 식민지배에 충분히 사죄했다」 日65%··· 韓은 1%」(2015.6.18) 『동아일보』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https://www.womenandwar.net/contents/home/home.nx>
 「2015 한일 그리고 세계 지식인 공동성명서 발표 및 전문」(2015.7.29)『경향신문』
 上野千鶴子(1998)『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青土社
 姜尚中(1995)『アジアとの断絶、歴史との断絶』『ふたつの戦後と日本-アジアから問う戦後50年-』三一書房
 _____(2003)『アジアの孤児でいゝのか』ウエイツ
 _____(2007)『増補版 日朝関係の克服-最後の冷戦地帯と六者協議-』集英社新書
 高吉嬉(2001)『<在朝日本人二世>の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旗田巍と朝鮮日本-』桐書房
 高橋哲哉(2001)『歴史/修正主義』岩波書店
 サミュエルハンチントン著, 鈴木主税訳(2000)『文明の衝突と21世紀の日本』集英社新書
 下羽友衛(2005)『地球市民になるための学び方-知識と行動をつなぐ学び』『地球市民になるための学び方-フィリピンにふれる, アジアに学ぶ-』『地球市民になるための学び方-現場体験学習のもつ教育力-』日本図書
 中塚明(2007)『現在日本の歴史認識-その自覚せざる欠落を問う-』高文研
 _____(2009)『解題』, 吉岡吉典『韓国併合』100年と日本』日本出版社
 日本社会科教育学会-国際交流委員会編(2008)『新しい社会科像を求めて-東アジアにおけるシティズンシップ教育-』明治図書
 旗田巍(1962)『韓国民衆の声を重視せよ』『世界』12月号
 _____(1969)『日本人の朝鮮観』勁草書房
 _____(1966.3.5)『日韓問題はおわっていない-植民地主義否定からの出発-』『NOMA プレスサービス』第66号(同(1969)『日本人の朝鮮観』勁草書房, 소장)
 文部科学省(2008.7)『中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 社会編』(2014년 1월 일부개정)

- ラルフ・ジョルダーノ著, 永井清彦他訳(1990)『第二の罪—ドイツ人であることの重荷—』白水社
「歴史検討委員会」(1995.8.15)『大東亜戦争の総括』展転社
「安倍談話, 「評価」40% 朝日新聞世論調査」(2015.8.25)『朝日新聞』
「「安保法案では平和にはならない」“平和学の父”ガルトゥング博士インタビュー」(2015.9.17)日刊SPA!』
<http://nikkan-spa.jp/934569>
「関係改善, とともに願う 朝日新聞東亜日報, 共同世論調査 日韓国交正常化50年」(2015.6.22)『朝日新聞』
「自由と民主主義のための学生緊急行動(SEALDs)(2015.9.2)「戦後70年宣言文」
<http://site231363-4631-285.strikingly.com/#sealds70>

논문투고일 : 2015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0월 19일

<要旨>

글로벌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본 한일관계

전후 70년과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은 한일우호와 협력을 도모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올해 8월 14일 발표된 아베담화는 그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것이었다. 오히려 아베정권의 보수적인 움직임은 한국인의 대일감정을 자극하고, 한국의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양국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일 양국 국민들이 함께 역사와 적극적으로 대면하면서 과거를 정산하고, 화해하고, 기억해가며, 미래를 창조해가는 일, 그리고 양국 젊은이들이 서로 교류하며 한일우호를 구축하고, 나아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과제를 함께 실천해가는 일은 한일우호와 동아시아 평화 구축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편협한 내셔널리즘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시민의 교류와 이해와 연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교육에서 ‘동아시아시민십교육’과 ‘글로벌시민교육’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고에서는 첫째로 역사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불성실한 자세를 ‘제2의 죄’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둘째로 글로벌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한일 양국 시민이 함께 실천해나가야 할 교육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Korea-Japan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e year 2015 is the year of “Post war 70th” and “Japan and Korea diplomatic normalization 50th”, and was expected to be the year of great opportunity to promote Korea-Japan friendship and cooperation. However, the “Abe Statement” announced on August 14th of this year was a great disappointment for this expectation. The Abe Administration’s conservative movement has stimulated Korean’s anti-Japan feeling against Japan and enhanced Korean nationalism leading to adverse influence on the media of both Korea and Japan.

In creating peace in Eastern Asia,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citizens of Korea and Japan face the past to settle, make peace, and remember the history to create the future together, while the youth work together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the world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ations. What is important as of now is not the narrow minded nationalism, but the exchange between the citizens beyond each nation. This is also the reason why ‘East Asia Citizenship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re attracting attention recently.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Japanese government’s insincere attitude, refusing to learn from the past, as the “the second crime”, and then suggests few educational problems in which both Korean and Japanese citizens should solve together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